

민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정당한 영장' 조건부

의총서 일괄 추진... 혁신위 "내려놓기 위한 시작" 긍정 평가 21일 2차 혁신안 발표... '공천 룰 쇄신'으로 확대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혁신위원회도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혁신의 물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별다른 반대 없이 추진됐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진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하지 여부를 아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 당연히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

권 포기 결의를 추진했지만, 이는 혁신위가 지난 달 23일 요구한 수준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혁신위가 애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으로 가결'을 요구했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사실상 이를 패싱했기 때문이다. 또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을 놓고 당심과 민심의 눈높이가 다를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혁신위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민주당 의총 추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민주당 모든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의원총회 결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그동안 민심의 눈총을 받아왔던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고 지난 13일 의총에서는 추진이 불발되기도 했다. 결국, 특권 내려놓기를 의면한다는 민심의 비판이 이어지자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나서면서 이번 의총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위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혁신위



수해 현장 찾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성북초등학교를 찾아 수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오는 21일 '꼼수 탈당 방지' 등을 골자로 한 2차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의 눈길은 공천 룰로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가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제한을 명분으로 공천 룰 쇄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외에서는 '동일 지역 구 3선 연임 제한',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폭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혁신위가 이를 밀어붙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영아 살해·유기범 처벌 강화'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

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부, 양파 TRQ 9만t 증량 결정 즉각 철회를"

김승남 의원 "농가 경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가 양파 TRQ 9만톤 증량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6월 양파 도매가격은 1207원으로 전년 6월 1343원보다 하락했고, 조생종양파와 중만생종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6.3%, 3.3% 증가하면서 올해 양파 생산량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1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의 양파 소비량이 연간 96만 톤이기에 이대로라면 지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양파 TRQ 수입을 5배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양파농가는 비료, 농약,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양파 수입 확대 결정으로 양파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야 '호우대책' 신속 입법 한목소리

당정, 지류·지천 대책 마련... 민주, 여야정 TF 구성 제안

여야가 충북 오송 공평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 발의 되어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

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라고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는 도시 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지난해 민주당 농운례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하

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하천 유역은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수해 사고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가려 '입법 속도전'을 벌일 전망이다. 오는 28일 종료되는 7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8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안 마련,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